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청문회 위증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민단체 활동 당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자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확인되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운동의 건강성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생활환경회의(시민단체)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관을 위반해 매달 급여를 받아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1억9000만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한 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형사처벌 논란이 확산되자 김 후보자는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활동비를 받은 것이다"고 말을 비장했다.

하지만 시민생활환경회의가 국제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800만원~2100여 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생활환경회의 관계자는 "법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준에 받아왔던 활동비를 불가피하게 급여 명목으로 책정했다"며 "기준 이사장들은 별도의 직임이 있어 무보수 명예직이 가능했으나,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 활동비를 계속 받았다. 활동비나 급여 지급에 대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시민단체 대표가 정관을 무시하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으며 공직에 입문하는 것이 다른 시민운동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설립을 주도한 시민생활환경회의는 27년 동안 광주지역 생활환경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강열 후보자 "활동비 받았다"는 주장 위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 '악영향' 우려

광주천 살리기와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운동, 대안에너지운동, 초등 학교 유해물질 감시운동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후원금은 2015년 4600만원, 2016년 4800만원, 2017년 4000만원 이고, 기업 후원금은 2016년 6100만원, 2017년 8000만원이다.

광주시와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와 비판이 시민운동의 건전성을 담보하는데 시민단체에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며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농협조합장 뽑는 소중한 '한표' 농협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농협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대학생 진보연합·국민주권연대 광주지부 "한국당 해체를"

한국당 광주시당 당직자에게 민원서 전달

당직자 욕설로 10여분간 옥신각신 하기도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13일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당 해체를 촉구했다.

대학생 진보연합·국민주권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 앞에서 민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씨 등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했다. '진두환은 영웅, 광주는 우리의 적'이라는 막 말도 쏟아냈다. 하지만 망언자들에게 대한 징계를 미루며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광주시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39년 전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민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당직자는 '트집을 잡는다' 개인적 태도"라며 입씨름을 벌였다. 고성인 오가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은 "민원서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전남 오후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단체 일부 회원들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당직자 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면서 10여 분간 승강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체는 사과를 촉구했고, 당직자는 "트집을 잡는다" 개인적 태도"라며 입씨름을 벌였다.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은 "민원서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전남 오후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남규 기자



지인 살해 후 유기 20대들 5년 만에 검거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이후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 3명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A(28·여)씨와 A씨의 전 남편 B(28)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의 남동생 C(26)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D(당시 21세·여)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를 불러 D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남구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이후 시신을 대형 고무봉에 넣고 흙 등으로 덮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 가족은 D씨가 부산에 사는 언니와 함께 지내다며 마지막으로 일린 이후 연락이 끊기자 2015년 12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이혼했고,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털어냈다.

이에 A씨 지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17분에 112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주소지를 경찰에 알렸다.

신고된 받은 경찰은 강력사건으로 판단, 형사 5개팀을 동원해 수사를 벌여 신고 40시간 만에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수습한 유골의 DNA를 검사한 결과, D씨의 가족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D씨는 경북의 한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사이로, D씨는 2014년 6월 A씨의 제안으로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후 D씨는 A씨와 B씨 등과 한 집에서 3주 정도 살다가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다.

경찰은 "D씨가 A씨의 어린 자녀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전 남편인 B씨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A씨는 D씨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심을 품고 있다가 B씨와 함께 D씨를 폭행해 결국 살해했고, 이들은 처벌받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D씨가 숨지자 C씨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멘트를 넣었고, 이를 뒤 시신을 담은 가방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겼다. 이어 시신을 대형 고무봉에 넣어서 흙 등으로 덮고 그 위에 세제를 뿌렸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시멘트, 고무봉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이사를 하면서 시신을 유기한 대형 고무봉도 함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극단배우 의붓딸 성폭행·추행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의붓딸에게 "엄마를 보러 놀러 오라"고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의붓딸에게 몸살짓을 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성기가 아프다"며 피해자가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폐기물 공장서 근로자기계에 끼여 사망

인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60대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에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폐기물을 선별하는 기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국인 근로자 A(65)씨가 기계에 몸을 낀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선별기 내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 기계 위 난간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